

바꿈청년네트워크 간담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 ▶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오후 7시
- ▶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 개요

- 일 시: 2016년 1월 20일(수) 오후4시
- 장 소: 세교연구소 회의실
- 주 제: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현실과 그 역할

□ 취지

- 남북, 한미,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의 모색을 위한 강연과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토록 함
- 바꿈, 세상을바꾸는꿈은 4.9재단과 함께 진보-보수 청년들이 함께하는 북한비핵화VS남북관계개선 우선순위 투표를 한 바 있음. 합의회의 연장선상에서 토론을 통한 진보-보수 사이의 공동 지향을 모색함.
- 이를 통해 의견이 다른 청년들의 토론을 이끌어내고 전문가가 중심을 잡아 주는 구조로 진행하여 청년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
- 향후 청년세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남북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연속 시리즈 기획의 시발점으로 삼도록 함

□ 단계별 기획

- 1단계 : 2030세대의 통일 논의 촉발, 간담회 형식 토론 및 대담
 -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의 자신감을 가져야
 - 문재인 정부, 미중 패권에 맞춰야 VS 주도적 역할 찾아야
 - 2030청년 평화/통일 주제의 도서 발행

- 2단계 :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확대 모색
 - 청년들은 남북 두 정상에게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바랍니다.
 - "대동강 맥주 맛있잖아요" 남북청년들 '치맥회담' 열릴까?
 - [합의회의①] 20대, 개성공단을 어떻게 생각할까?
 - [합의회의②] 북한인권, 2030세대의 생각은?
 - [합의회의③] 대북지원 어떻게 해야할까?
 -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개선, 당신의 선택은?

- 3단계 : 2030 청년단위 평화통일 기획 확대 발전
 - 청년 주도로 평화통일에 관한 공론장 기획 발전
 - 관련 논의를 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범위의 사업 기획 확대
 - 2030 중심의 평화통일 방향에 대한 숙의와 대안 모색

□ 프로그램

(1) 순서

순서	시간	내용
식사	18:30-19:00 (30분)	식사
개회	19:00-19:10 (10분)	취지 및 목적 강사소개
강의	19:10-20:00 (50분)	강의 및 발제 / 질의응답
토론	20:00-20:50 (50분)	참석자 전체토론 및 상호토론
총평	20:50-21:00 (19분)	

(2) 사회: 홍명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사무국장)

(3) 발제: Spencer H. Kim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4) 토론자: 총 15명

	성명	소속
1	강송희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 HK연구원
2	김광권	서울대학생유권자센터 부국장
3	김정민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4	김혜성	중앙대 독어독문과
5	박성준	통일드림 통일교육전문강사
6	박아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7	송명섭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	서형진	동국대 북한학과
9	전세훈	청년모임 배움품앗이 대표
10	전영민	(사)청년과미래 정책총장
11	조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12	채훈영	
13	최성용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14	최수지	와세다대 정경학부
15	홍순기	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

□ 이후 계획

- 3단계 : 2030 청년단위 평화통일 기획 확대 발전
 - 청년 주도로 평화통일에 관한 공론장 기획 발전
 - 관련 논의를 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범위의 사업 기획 확대
 - 2030 중심의 평화통일 방향에 대한 숙의와 대안 모색

※ 통일교육원장 간담회

- 일시 : 2018.11.6.(화) 오후 1시 20분~2시 20분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외 5개 세미나실
- 주제 : 통일교육원장과 2030의 통일교육 한마디 /
- 내용 : 이 시대의 청년에게 평화와 통일은, 그리고 통일 교육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 토론회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강송희 연구원

2018년은 지난 남북의 분단사에 있어 역사적 격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선언의 이행과정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남북관계에 있어 진전을 보인 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두 정권에 걸쳐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과 남북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또한 남북분단 이래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던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지나 버렸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기대 혹은 여야정권 교체에서 오는 남북관계의 변화에만 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남북 변화의 기류는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의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남의 진정성’은 비교적 잘 거론되지 않는다. 사실 남북관계는 분단체제의 유지와 맞물려 왔다. 긴 분단을 지내오면서 남북은 ‘상호 적대적 공존’형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상호 적대적 공존 형태의 분단은 남북 정권의 독재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인접한 ‘적’에 대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통제권 행사의 명분을 얻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안보논리는 낡고 낡은 이야기이나 최근까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남북정권이 남북관계와 분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온 역사는 길다.

이런 배경을 염두해 보고 이번 정상회담을 살필 때 ‘남의 진정성’이 보인다. 그것은 판문점에서 깜짝 일어났던 2차 정상회담이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재를 위해 움직였다. ‘정치적 보여짐’을 위해서가 아닌, 위협을 감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북은 남북관계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 실행과정에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남북관계가 진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여러 업계의 기업들은 교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

동특구가 남북경협 시범적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여 당시 정부가 취했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개개인, 국민들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접근이 가능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권이 교류에 합의하고 사람이 오가면서 생길 만남과 어우러짐은 같이 살아나가야 할 사람들의 문제가 된다. 문화 교류를 위해 평양에 방문한 한국 연예인들이 SNS에 평양냉면의 맛에 대해 올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집을 출서서 방문하는 것처럼, 사람의 만남은 많은 파장을 몰고 온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독일통일은 재통일의 성공적 사례로 많이 거론되지만, 독일 통일은 서독·동독 주민들 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는커녕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남북관계가 빠른 진전을 보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통합의 근본적 이유에 대해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다시는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지 않을 평화의 장착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남북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마음의 장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한국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

김광권(서울대학생유권자센터 부국장)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이며 세계의 몇 없는 공산주의 국가와 우리는 대치를 하고 있다. 반도라는 특성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1년에 한번씩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유럽에는 발칸반도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의 시초가 된 지역이고 최근에도 코소보 사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타국이다. 미국, 소련의 강대국의 합의로 인하여 분리되어 73년간 살아왔다. 향후에는 통역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첫 방북 이후 3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여 최초로 평양에서 연설을 하였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개발하였다. 미국이 제재압박이 강해진 것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본토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왜 핵개발을 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로 보여진다. 우리나라가 위협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적대국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며 핵폐기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 평화협정과 핵리스트를 맞교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1순위이다.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서독과 동독은 GDP가 4배 차이였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당시 동독지역은 현재도 경제 수준이 70%정도라고 한다. 통일비용은 지난 20년 동안 3000조원 이상 들었으며 우리나라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이 한해 470조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난민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조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갔다오고 트럼프처럼 거칠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 개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역을 다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부지에는 원래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후방으로 물러났다. 개성공단 같은 공업단지가 휴전선 근처에 생긴다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익까지 가져올 수 있다. 햇볕정책에는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토론문

김정민(성공회대학교 신학과)

북한의 핵포기 과연 진정성 있는가?

김혜성 (중앙대 독어독문과)

올 한해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였습니다.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특이한 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길게 보였던 여정이 이제 겨우 10개월 지났을 뿐 일만큼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어느덧 비핵화 의지 천명도 3대째입니다.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었으며, 그의 아들인 김정일 전 위원장은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평화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끌어올렸으나 뒤에서는 열심히 핵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현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삶이 구만리가 넘게 남은 젊은이라는 점, 북한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 북한을 향한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의 근거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졌던 일련의 간부 숙청, 그의 친형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은 북한정권이 과연 바뀌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제법 능숙하게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현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장을 파괴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니 한국과 미국에서 더 큰 보답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풍계리 핵 실험장을 파괴했다 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는 영향이 없으며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실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북한이 어디에 또 실험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지금까지 핵실험을 해 온 인적자원과 인프라들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ICBM을 거슬러 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ICBM을 포기하는 정도로 협상이 끝날 경우 우리나라를 향한 위협은 그대로라는 점, 혹은 북한의 진짜 목표가 남한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 경계해야 할 생각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자는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를 외칩니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일으키고, 핵을 만들어 협박을 일삼았던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노출된 작은 틈을 더 경계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밥이다

박성준(통일드림 통일교육전문강사)

평화는 힘으로 유지 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 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다. 평화는 힘의 논리와 우위에 움직여져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와 신뢰 ,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 가며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이러한 과정가운데 평화와 대화의 길로 서로의 공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3차에 이른 남북정상회담, 남북군사회담,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사회문화교류 등 많은 교류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김정은위원장 서울 방문, 남북 국회회담 등 지속적인 대화의 물결을 준비하며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보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러나 70년이상의 적대관계와 함께 북핵문제로 서로간의 신경전과 불신이 가득했던 시간들을 핵문제로 함께 단기간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서로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공존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친밀한 과정을 통해야 하며 북핵이라는 문제로 인한 선택 폐기 후 관계개선은 엄청난 시간의 낭비 일뿐 아니라 분단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이러한 굴곡한 역사의 한 장면에는 이념으로 인한 희생과 함께 지금까지도 GDP 대비 세계 10위의 43조의 엄청난 국방비 ,좌파 우파로 나뉜 사회적 갈등은 이러한 상황 속 에서 평화라는 목표는 통일문제 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와 함께 분단국이었던 독일, 키프로스,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우리와 갈등의 문제와 발생배경은 다르지만 군비확장과 이념적 갈등은 오히려 긴장과 불신의 관계를 더욱 만들었고 결국 대화와 교류에 의해서만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례들과 지금의 남북관계를 통해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평화의 중요성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평화공감교육 국민적 인식에 대한 확대 방안들은 부족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 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모두가 고민하고 힘써야 하겠다.

한민족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달라

박아람(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장을 이야기 한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 핵 보유가 명확시 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간의 교류협력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적대적 대북정책 기조를 내세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민족‘통일’이라는 꿈을 갖게 됐지만 요즘시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 적대적인 대북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북한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개념보다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고도화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북한의 비핵화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각인됐고 UN을 통한 대북제재와 더불어 각각의 국가별 대북제재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사실상 대북제재체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재를 통한 비핵화는 과연 달성 가능할까?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핵포기’지만 사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내의 비핵화 즉, 자신들의 핵무기뿐 아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내에서 사라지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다. 지금은 사실상 과거 우리나라의 공화국 시절과 달리 반공교육을 받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반공교육을 받아온 세대, 그리고 오랜 분단과 북한의 핵개발로 우리안의 전쟁과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정부입장에서도 쉽사리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대북제재’인 것인데 대북제재는 과연 현실적일까? 미국 예일대의 『Nuclear Politics』의 저자 뎀스와 몬테리오에 따르면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의지’와 ‘기회’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북한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 이유는 적대국보다 약한 힘과 동맹국의 낮은 안보보장이 북한에게 위협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는 한 중국이 강력한 안보보장을 해주지 않는 한,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없는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위협의식만 증가시킬 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더불어 중국이라는 존재는 북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진 않지만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들 만큼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효력은 중국이 동참해야 가능할 것이다. '기회'의 측면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으로 '선제타격'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여부다.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보복전쟁을 할 경우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타격'을 선택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의 대상은 미국이라고 얘기하듯 북한이 핵을 개발 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남한과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북한의 위협의식을 낮춘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머지않을 것이다.

토론문

송명섭(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와 북한의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고, 그 뒤 미국 등 대외적인 만남도 성사 되고 있다. 이는 분명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화해의 분위기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북한을 신뢰해도 좋은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국가대 국가의 거래 관계에서는 자국의 최선을 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관례가 있다. 이를 자국이기주의라는 식으로 폄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마땅히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이나,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의 최선의 이득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이 각각의 이기심이 곧 발전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몇 가지의 게임에서 알 수 있듯, 개개인의 이기적 행동은 공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견된다. 특히 이런 경향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조금 변형된 게임이 있다. 이 게임에서의 말들은 선한자(항상 양보), 악한자(항상 배신), 카피캣(양보 후 상대가 한 것을 따라서 반복함), 약한 의미의 카피캣(양보 후 상대가 한 것을 따라하지만, 상대가 배신했을 때에 몇 회 정도는 용서해줌)이라는 룰로 경합을 한 게임이다. 각각의 말들은 일정 확률로 실수로 배신 혹은 양보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 게임에서 나왔던 결론은, 실수의 확률이 아주 높으면 배신자가. 중간 정도 수준일 때에는 약한 의미의 카피캣이 높은 점수를 가져갔으며, 낮을 때에는 카피캣이 높은 점수를 가져갔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체결한 조약을 어기는 것은 분명 타당하진 않지만, 전 정권의 모든 책임을 현 정권에게 묻는 것 또한 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표라는 정통적 특이성을 생각했을 때에, 김정은은 백두혈통 등 지난 정권과의 연관성을 끊지 않고, 오히려 강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대남 도발에 대한 입장 표명 혹은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한국에서의 전쟁,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없는 이 상황은 배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또한, 과거

의 도발을 없던 것으로 용서해주기 위하여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북한이 변화 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입장 표명이라는 언어를 통한 사과 혹은 사죄도 없이, 단순히 묻고 지나가며 우리는 한민족이자나라는 식의 어물쩍한 대응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선의 이득을 취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배신한 대상을 항상 배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명백하게 배신 할 것이라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 또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는 책임성 없는 행위이다. 국내에서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행위를 이번 정권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북한 내에서의 자정이 있어야만, 지난 정권의 불꽃에서 확실하게 단절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대 국가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관계개선을 통한 비핵화

서형진(동국대 북한학과)

2018년 1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 이후로, 남북관계는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 유례없는 형태의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었고,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큰 성과 역시 얻어낼 수 있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합의했다. 최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키워드는 비핵화이다. 소위 '빅딜론' 과 점진적 비핵화 간의 논란이다. 과연 어느 쪽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빅딜론이란, 북한이 국제 사회, 즉 미국이 용납할 수준의 큰 비핵화 제스처를 보인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시대착오적인 요구이며, 한반도의 평화 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은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다. 북한과 같이 국제 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즉 외교적 카드가 전무한 국가에게 핵은 그 자체로 중요한 외교적 카드가 된다. 이를 이용해 북한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공표한 바 있는 경제 발전과 이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체제 보장이다. 실제로 이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로 '평화' 즉 '체제 보장'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직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발사장을 폐기하는 선제적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제스처는,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후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는 필수적인 관문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관문에 매몰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은 핵이라는 카드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던 하나의 큰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합의점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고립과,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을 만들었다면, 반대로 핵 없이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핵을 고집할 이유 또한 없어지게 된다.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 는 식의 주장이 과연 북한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전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끝내는 핵을 완성한 북한이 아니었던가.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평화는, 절대 수학적으로 1을 주면 1을 받는, 간단한 공식이 아니다. 달라진 상황과, 달라진 대상과, 달라진 정서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는 현명한 외교를 펴 나가야 한다.

토론문

전세훈(청년모임 배움품앗이 대표)

전쟁을 치른 국가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입장은 동맹을 강화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현실주의적 방식이다. 둘째, 국가 간 조약과 협정을 통해 상호 불가침과 평화구축을 약속하고, 이후 군비축소 등을 통해 신뢰구축을 도모해 가는 자유주의적 방식이다. 이들 입장은 국제정치에서 많이 고려되어 왔던 방식이다. 이번 정부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인 자유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주요한 패러다임이었다.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이다. 대개 종전선언 무용론,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동맹 등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는 방식을 고수하려는 듯하다. 물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택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 ‘극단적이면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자’는 입장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 득과 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비핵화 우선인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우선일지는 득과 실을 따져서 보아야 한다. 득과 실은 따질 때는 상황과 시대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자. 군사 긴장을 통해서 북한을 단순히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혹은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 여부 역시도 고민해봐야 한다. 남북문제는 남과 북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니다. 전쟁 당사국이 모두 나서야만 종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 당사국들은 ‘적당한 긴장’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보수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을 믿지 않는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봤을 때 협정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필자는 평화협정을 둘러싼 ‘전쟁위협론’이 ‘평화협정=무장해제’처럼 이해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주한미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한미동맹에 의한 것이다. 또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완전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평화협정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비관론’ 역시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로 인해서 군사법, 헌법 등에 명시된 안보 측면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북에 관한 위협은 당연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정이 먼저 체결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유주의 바탕의 협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 상황이 유지되는 이유 역시도 '협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이유는 '종전'이 된 게 아니라, '정전'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 체계로 만들어진 협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상태에 있다. 이 협약을 바꾸는 것은 지속적인 대치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조약을 만드는 것이다. 비핵화도 결국 전쟁이라는 지속적인 상황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적 방식인 평화협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평화가 전쟁의 원인이다.

전영민((사)청년과미래 정책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면서 비핵화와 종전협정 등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나에게 있어 전혀 낯설지 않다. 어린 시절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꿈만 같았으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2년 뒤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이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2005년 북한에서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통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였지만, 2년 뒤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 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인들을 죽였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괴롭혔다. 위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도발은 대립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발생하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는 북한과의 역사를 통해 북한의 양면화전전술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에 속아서는 안된다. 한 역사적인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독일 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큰 피해의 원인은 소련이 독소불가침조약이라는 종이 한 장짜리 평화에 속았기 때문이다. 소련이 독일의 침공에 대비를 하였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 의지를 많이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북한의 김영남이 “한반도 비핵화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2008년, 2010년, 2011년에도 북한에서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2018년 지금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의지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는 원인은 ‘제재완화’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재완화와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이 없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체제와 김정은의 1인 독재는 우리나라에는 계속적으로 위협이 된다. 오히려 핵과 지원을 교환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권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포기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지, 북한 지도층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영화 강철비에 ‘분단이 분단국가의 국민들을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 때문에 분단국가의 국민들이 불행하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영화 스토리 상 분단으로 얻는 이득이란 분단으로 발생하는 대립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분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짜평화를 이용하는 것 역시 정치인이 분단으로 얻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있기 전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국에서도 11월에 열릴 중간선거에 북미정상회담을 이용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준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를 포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대대적인 보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비핵화로 얻을 이득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되었던 5.24 조치 등을 비롯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만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가짜평화에 속아 진행되는 북한 경험과 북한 지원은 많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토론문

채훈영

과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를 하려고 할까? 과연 비핵화는 가능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는 필수인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한민족”이라는 단어로 더 이상 감성적으로 대응할 때는 지났다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를 대하는 태도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때라 생각한다. 그랬을 경우, 과연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은 무엇을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려 하며, 그것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행동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객관적 상식으로 약 70년간 적화통일을 목표로 자국민 돌봄을 외면하면서 키워온 군사력과 무력 또 궁극적인 핵무기 정착을 과연 단기간 사이에 포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찾을 수 있을 때 신뢰를 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기대하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북한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과연 왜 그럴까? 그 이유들은 가정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들이 받침이 되는 사실이어야 한다. 과연 그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제사회 규제의 철회일 것이고,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 리용호의 유엔에서 발언을 보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우선 철회를 요구하였고, 핵의 ”비확산“을 언급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핵을 만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들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 후 영향력을 넓혀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체제유지를 도와주는 꼴임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는 한민족 국민들의 인권유린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고려할 다른 점은 과연 북한은 통일은 원하는가? 또 그들의 국가적 목표인 적화통일을 포기 하였는가?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하는가? 평화를 위해 통일이 필요한가?

당장 종전선언을 한 후, 또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조가 정착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발생한다. 그러하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북한을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감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해야한다. 비핵화과정에 철저한 모니터 과정이 필요하며, 종전선언, 판문점 선언 등의 이벤트를 무한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되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하는 본질적인 목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이득을 잊지 않고 대해야한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현 대한민국 군대의 최대의 존재 이유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통해 종전이 되었다고 해도 안보에 관한 것은 더욱 더 강해져야하며 군 존재의 이유는 국가의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으로 앞으로 있을 위협과 위험에 대비해 다른 국가들과 같이 더욱 더 강해야 한다. 쉽게 신뢰하지 않되 강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하며 국경의 경계는 쉽게 포기하고 철수 하는 것은 위험이며 국경을 지키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안보는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프레임 벗어나 국가를 위해 꼭 필요적으로 강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건전한 국가관계 안에 대립, 곧 경제적 교류와 국경 경계를 기준으로 된 두 주권의 대립의 공존이 현시대에 가장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문

조현재(고려대 경영학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전망: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최성용(성공회대학교 대학원생)

오늘날 동아시아를 수놓는 세 가지 풍경이 있다. 미-중 패권 다툼, 남-북 정상회담, 일본의 극우화. 일견 각기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풍경은,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밑바탕에 있는 맥락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꼽힌다. 식민주의와 냉전, 그리고 네이션 빌딩.

동아시아의 외연을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로 설정하자는 주장도 있는 만큼, 동아시아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혹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네이션 빌딩 과정은 일본의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동시에 냉전 질서로의 편입 과정이기도 했다. 모든 국가의 네이션 빌딩 과정은 언제나 폭력, 내전, 학살을 동반하는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식민주의와의 대결, 그리고 냉전 질서 하의 동서 진영논리가 네이션 빌딩 과정에서 비극적인 유혈적 고통을 촉발시켰다. 동아시아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냉전Cold War이 아니라 열전Hot War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그 열전의 최전방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냉전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분단체제가 오늘날까지 온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은 동아시아의 냉전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특히 핵무기의 역사는 냉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이다. 핵무기가 소위 MAD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냉전의 종결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냉전 질서는 전후 일본의 과거 청산 부재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을 냉전질서 하의 파트너로 설정하기 위해 천황을 정점으로 한 총력전 체제의 청산 문제를 재빨리 봉합해버렸고,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극우세력은 전전 국가체제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 양안관계 역시 한반도와 같은 냉전의 산물임은 물론이다. 중국은 대국굴기를 외치지만 그것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서구나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로 진화해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가능성은 상당하며 새로운 형태의 냉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물론 그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생존전략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은 이런 동아시아의 넓은 지형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만이 냉전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여전히 그런 잔영 속에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극복에 대한 구상은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극복의 전망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비가역적인 평화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본의 극우화와 미-중 갈등이라는, 각각 20세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상기하게 하는 위험요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 전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가령 일본의 전전 체제 복귀와 핵무장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남한은 북한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 한반도 정세의 호전은 일본의 극우화 드라이브를 억제하고 미-중간 완충지대 및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라는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질서와 구조를 변형해나가는 남한의 주도적인 리더십에 대한 담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동아시아 비핵지대(일본의 리버럴-평화운동세력과의 연계, 미-중-러의 핵감축)로 연동시키는 것이 그 한 사례겠다.

국제정치의 기본 전제 중 하나는 국가라는 행위자를 불가분한 아톰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의 촛불이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동인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 전제가 현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모두 서로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이 점증하는 상황과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 라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남한 민족주의'가 북한의 인민에게 보여주는 정서는 극우적 배타주의의 형태와 아주 닮아있다. 이는 한반도-동아시아 프로세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잠재적 갈등요소가 식민주의-냉전의 기억과 잔영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은,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냉전 멘탈리티의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문재인-김정은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한 나름의 교훈에 기반해 '속전속결'을 그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남한과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변동 리스크가 커지기에, 적기에 빠르게 불가역적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정전 및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의 도달점이라기보단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 시작점에서 다시금 과거 6자회담 틀과 같은, 주변국들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인 평화체제 구축(경험을 포함한) 프로세스가 요구될 것이다. 이것을 동아시아 비핵화-지역 경협-평화체제를 향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세지는 미-중 갈등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일은, 남북한의 내적 역량과 6자 회담을 통한 견제와 균형만으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동아시아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합종연횡을 고민해볼직하다. 미-중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블록을 형성하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결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세안에 남북한이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며, 오늘날 아시아의 중견국가로 떠오르는 베트남을 포함해, 남북한-대만-베트남-인도로 이어지는 연대의 고리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산업화, 민주화, 비핵화와 평화라는 남한의 역사적 자산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 - 비핵화가 곧 평화는 아니다

홍순기(내일을 위한 오늘 운영위원)

동북아 한반도의 정세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쟁이나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다시금 '평화'로 회항하는 듯하다. 확실히 올 초의 전쟁분위기에 급격하게 평화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마치 극과 극을 경험하듯이 말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가 될 것"이라며 손에 꼽히던 때가 신기루였다는 양.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북한의 본심일까?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평화를 보존하는 최선책은 전쟁당사자가 자기를 교수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때이다"라고 했다. 과연 전쟁당사자의 손자이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당사자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할까? 북한의 고위층은 그렇게 생각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 요근래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다. 불가역적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정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평화'의 전부인 양, '통일'의 전부인 양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지금 분위기에 한껏 젖어들어 지나치게 낙관하면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이 핵만 없으면 교류의 대상이고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되는 것인가? 자유중국이 핵이 없어서 중국과 통일을 하지 못했던 걸까? 혹은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못했던 걸까?

역시 아니다. 자유중국이 핵이 없어서도, 중국이 핵이 있어서 통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한 분단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유시장경제를 김정은이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의 문제이며, 3대 세습독재를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는 전자만 이룩하고 후자는 유지되는 상태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후자를 통해 이룩한 전자마저 다시금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평화적인 국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패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그렇게 가지 말란 법은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 우린 우리 국가와 국민만의 평화와 안위만을 꾀하면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삶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자유를 향한 갈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함께 따져가며 고민해 진정한 비핵화와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비핵화의 길은 좋다. 하지만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비핵화는 이제 3단계 중 1단계만 완료를 하게 되는 것일 뿐, 2단계 3단계 조치를 위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1단계 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 김정은 정권과 더 이상 평화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말이다. “철면피의 악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한 위선이 낫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의 말이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지만, 후자의 경우도 영원한 평화가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을 우리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